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19-2

(공개)

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

2023. 8. 17.

관계부처합동

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[요약]

I 추진 배경

-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한국 데이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」 마련·추진
 - ※ [국정과제 11]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 - 데이터를 주인인 국민에게로,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추진
 - ※ 마이데이터(MyData) : 정보주체가 본인/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혁신적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형 자기결정권
- (정보주체 측면) 인공지능(AI) 중심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 - ※ 기업·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
- (데이터 생태계 측면) 기업·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융합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
 - ※ 데이터 경제의 성패는 가치 있는 '개인정보'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으나, 현재는 폐쇄적 데이터 활용으로 한계를 겪는 상황

II 마이데이터 성공의 전제조건

- ①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, ② 데이터 상호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, ③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성패를 좌우
 - ① 전 분야 확산시 개인정보 이동·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되어야 마이데이터 안착·성장 가능
 - ② 다양한 인증·식별체계간 상호연계, 표준화 및 API 확산, 데이터 중계 등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인프라 보강 필수
 - ※ EU 등 해외 주요국도 마이데이터를 제도화했으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
 - ③ 데이터 공유·확산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

Ⅲ 비전 및 미래상

- ◇ 비 전 :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
- ◇ 목 표 : 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30개 지정
(27년) ②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규모 20% 이상 추가 성장
③신기술,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 500개 등장
- (국민)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, 번거로운 서류·절차 없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편의 증대
- (기업)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,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
- (사회)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·재난·안전·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

Ⅳ 추진방향 및 전략

- ◇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·시장의 역동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체감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

※ ('23) 법제도 수립 착수, ('24) 선도서비스·인프라 구축, ('25) 본격 시행, ('26) 단계적 확대

- (단계적 확대) 초기에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,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·단계적으로 추진
 -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10대 중점부문(안)을 선정하고, 해당 부문 내에서도 데이터 전송범위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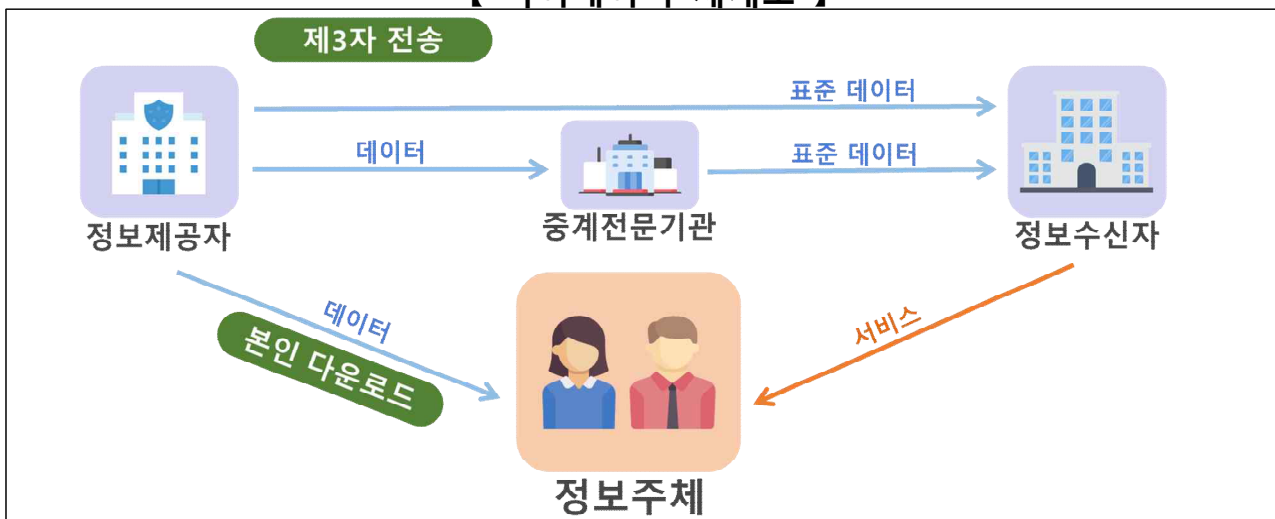
【10대 중점부문(안)】

보건의료	통신·인터넷 서비스	에너지	교통	교육
· 의료(병·의원) · 의약품(약국) · 웨어러블기기 · 건강정보	· 무선통신 · 플랫폼·포털 · 서비스	· 전기 · 가스 · 수도	· 철도 · 항공 · 자동차임대	· 초·중·고등 교육 · 평생교육 · 온라인 교습
고용노동	부동산	복지	유통	여가
· 고용알선·인력 · 공급	· 부동산 임대·공급	· 사회복지 · 서비스	· 온라인쇼핑 · 대형마트	· 숙박 · 여행

- '25년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'24년부터 발굴·지원하여 우호적 인식 확산

- **(프라이버시 보호)** 데이터 이동·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수립
 - **(마이데이터 안전 준칙)** 필요정보 최소 수집, 전송목적 범위 내 활용 등 정보주체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 준칙 마련
 - **(플랫폼 운영)** 전송요구 및 전송이력 확인·중단·파기 등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지원
 - ※ '24년 플랫폼 구축 착수, '24년중 순차적으로 베타버전 공개, '25년초 정식 오픈 추진
 - **(보안·식별 메커니즘)**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 방지 대책,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식별·인증체계 등 마련
 - **(엄정 제재)**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과징금·시정명령·과태료·벌칙 등 제재,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
- **(민간 역동성)** 시장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립

【 마이데이터 체계도 】



- **(정보수신자)**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*하고, 필요한 부분만 허가·지정제** 운영

* 개인정보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·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, 불필요한 진입규제 배제

**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(전문기관 지정) 운영

- (중계기관)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중 분야간 데이터 이동·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중계 전문기관* 도입

* 중계 전문기관 :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하여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

- (인센티브) 기업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과금체계 수립, 마이데이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립

< 단계별 추진전략 >

- ◆ **【준비 : '23~'24】**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**인프라 구축 집중**
 - 정보주체 권리 법제화, 온라인 플랫폼 구축, 전송항목 표준화 추진
- ◆ **【도약 : '24~'25】** 국민이 지지하는 **지속가능한 시장기반 구현**
 - 선도서비스 발굴,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 마련,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 보강
- ◆ **【확산 : '25~'27】** 데이터 체질 강화를 위한 **서비스 혁신생태계 고도화**
 - API 경제인프라 확장, 디지털 혁신기업 창출, 사회적 난제 해결 프로젝트 확대 등

V 부문별 발전방안

◇ **선행부문은 데이터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, 의료·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혁신적 서비스 발굴**

- (선행부문) 금융·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지원
 - (금융)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 항목과 연계하여 다양한 융·복합서비스 확대
 - (공공) 민간·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 확대

- (신규부문) 의료·에너지·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, 이중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
-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발굴하고, 마이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부문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
-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,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최종 정책방향 논의

【 생애주기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】



VI 추진 체계

◇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 추진

-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로 『협의회』를 운영(‘23.9월 출범 예정), 실무적으로 제도·정책의 집행·운영을 위해 『추진단』 신설(‘23.7.24.)
- (민관 협의회) 민간전문가·산업계·시민단체·관계부처* 등이 참여(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), 제도개선·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방향 논의
 - * 개인정보위 외 기재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·국조실·금융위 등 11개 부처 참여
- (실무추진단) 관계부처, 민간·공공 전문인력으로 구성, 법제도 수립 및 선도서비스 발굴, 플랫폼 구축·운영 등 실무적 정책 집행·운영

순 서





I. 추진배경	1
II. 마이데이터 의의 및 생태계	3
III. 비전 및 미래상	9
IV. 추진방향 및 전략	11
1. 추진방향	12
2. 추진전략	13
① 정보주체 관점 서비스 구현 ④ 단계적·점진적 접근	
②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⑤ 민간 역동성 확보	
③ 플랫폼으로 투명한 권리행사 ⑥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	
V. 부문별 발전방안	22
① 선행 부문 (금융 · 공공과 연계	
② 신규 부문 (의료 · 통신 · 인터넷서비스 · 에너지 등) 발전	
VI. 추진체계	24
VII. 향후 일정	25

I. 추진 배경

◆ **[정보주체 측면]** 마이데이터는 **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**

- IT·플랫폼 성장속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·활용되지만, 정작 데이터 주인인 국민은 수동적 지위에 머물고 권리행사에서 소외
 - 개인정보 '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' 제도하에서 수집·생산되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기업의 의사에 따라 활용·유통
 - * 국민들은 기업·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, 동의한 이후에는 데이터 활용·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
 -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프라이버시 침해, 불필요한 서류·절차 등 불편 감내
 - * 우리나라의 발전된 통신·IT 환경에서도 국민은 병원을 옮길 때 기존병원에서 진료·검사내역을 CD·종이서류로 발급받거나 CT·혈액검사 등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 다수
- 기업 주도의 데이터 활용 관행이 고착화됨에 따라 데이터 독과점, 중소기업의 데이터 부족 및 활용역량 저하 등 부작용도 지속
 - ※ ▶ 스타트업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한 **원천 데이터가 부족한** 상황 호소(과기정통부 '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', '22.6.23.)
 - ▶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**AI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**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(스타트업얼라이언스, '22.5.)
-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는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여 적극적으로 본인 개인정보를 관리·활용 가능
 - 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
 - 이를 통해, '나의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하는' 국민 중심의 데이터 보호·활용 기반 확대

◆ **[데이터 생태계 측면]** **소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기존의 폐쇄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단계 진일보**

-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데이터가 새로운 산업 발전과 사회·경제적 가치 창출의 핵심 경쟁력이자 촉매제
 - * 전세계 유니콘 기업 1,205개 중 데이터 기업이 538개로 약 **44.6%**를 차지('23년, CB Insights)
 - 주요국은 데이터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데이터 전략자산 확보, 데이터 신산업 육성전략 등을 국가 아젠다로 추진
 - ※ 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 구축('22.5.),  빅데이터 산업육성 시범사업('22.4.),  기업 데이터 전략('21.9.),  데이터 퍼스트 프로그램('20.6.)
 - 우리도 뉴욕구상('22.9월),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('23.1월),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전략('23.4월) 등 디지털 미래전략 마련·추진
- 이러한 국가 데이터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“개인정보”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으나, 현 체계는 한계
 - 인공지능(AI), 초개인화 서비스 등의 핵심원료인 개인정보가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하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
 - ※ (자율주행 AI 개발) 보행자 안전·장애물 회피 등을 위해 실주행 데이터 필요
 - (맞춤형서비스 제공)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초개인화된 데이터 필요
 - ✓ 미래 모든 비즈니스는 ‘데이터’와 ‘AI’가 연결되는 협업일 것('21년, MS CEO 나텔라)
-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국가 전반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기회
 - 기업·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터 유통채널을 대폭 확장
 - 특히, 대한민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통신·IT 인프라, 공공·민간 데이터 축적 등을 감안시 데이터 산업의 퀀텀점프 가능

◆ **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한국 데이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『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』 마련·추진**

- ※ 국정과제 11.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 - 데이터를 주인인 국민에게로,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추진

II. 마이데이터 의의 및 생태계

1 마이데이터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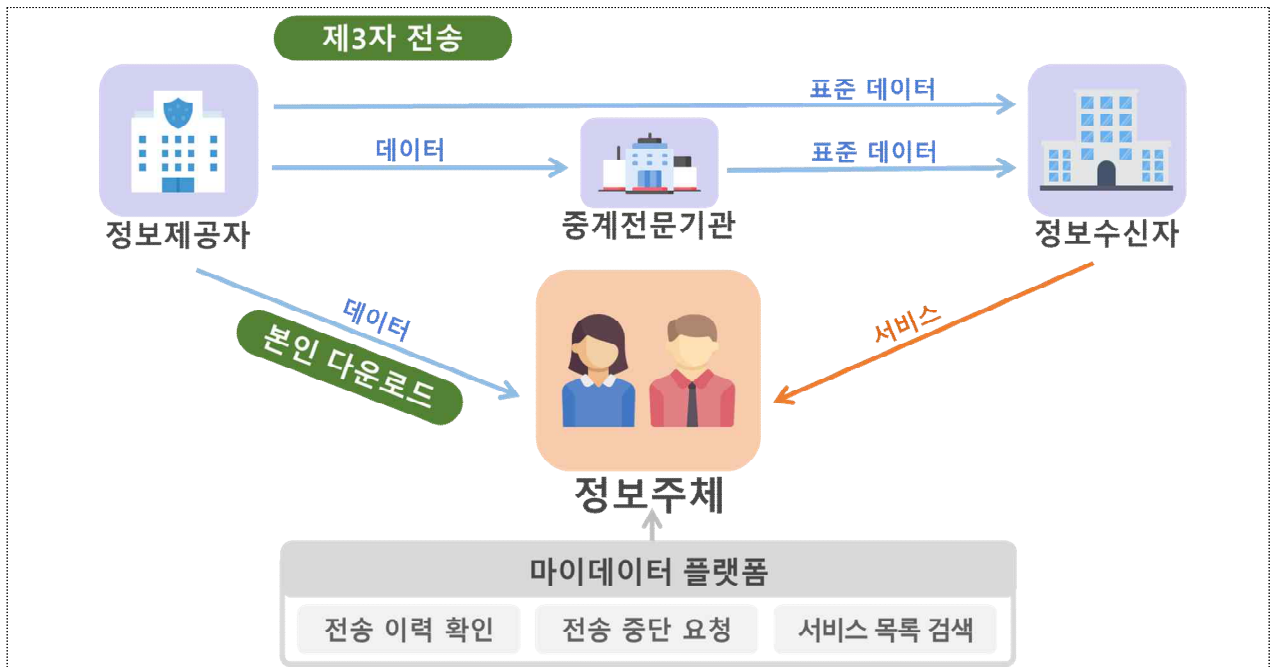
□ 마이데이터(MyData) 개념

-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
- 개인정보 유출·피해 방지 등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*하는 발전적 형태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
- *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·기관에게 **본인/제3자 전송요구권**을 행사하여 데이터를 이동시켜 혁신적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**21세기형 자기결정권**

□ 마이데이터 도입 연혁

- 마이데이터는 '16년 K-MyData 추진계획*을 통해 제시된 이후, '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국내 법제도에 반영
- *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('16년) : 특정 기업 보유정보를 개인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 제공하여 서비스 개발에 활용('20년 10개 → '30년 100개 기업 참여 목표)
- 신용정보법('20.8월 시행), 전자정부법('21.12월 시행) 개정을 통해서 금융·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도입
- '23.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*이 보편적 권리로 도입되어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
- *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(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)
- '23~'24년중 마이데이터 플랫폼·표준화 등 인프라 고도화, 하위법령 정비,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거쳐, '25년 상반기에 제도 본격 시행

□ 마이데이터 체계도



○ 마이데이터 참여자

- 정보주체 : 정보제공자, 수신자 등의 플랫폼·앱(App), 전송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
- 정보제공자 :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제공
- 정보수신자 : 제3자 전송요구권에 따라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
- 중계 전문기관 :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정보수신자에게 전달하고, 분야별 허브역할을 통해 이종 분야 간 연계
 - ※ 정보제공자-수신자 간 표준규격을 따르는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도 가능
- 마이데이터 플랫폼 : 전송요구·이력확인·관리 등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전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

○ 마이데이터 전송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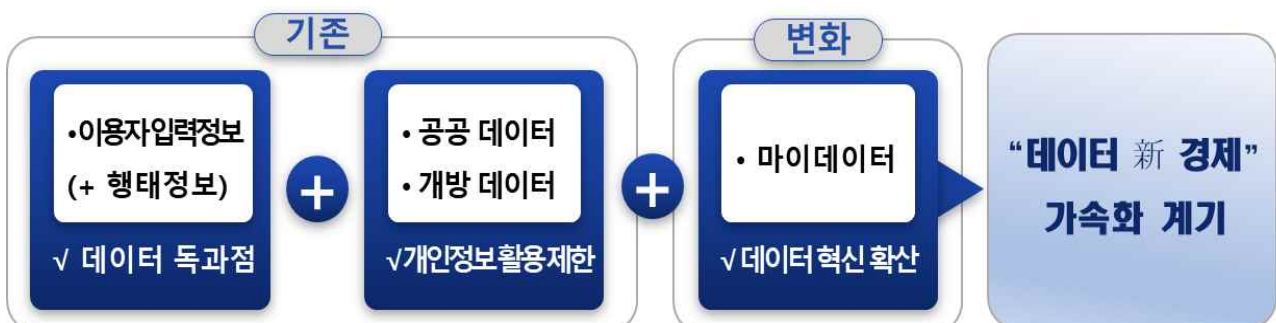
- 본인 다운로드 :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
- 제3자 전송 : 표준화된 형태의 API 방식 활용,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로 구현

□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경제

◆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동·융합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,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·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

-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가 융합·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, 가치 있는 데이터가 칸막이에 막혀 원활한 이동 제약
 -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분야 간에 이동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동일 분야 내에서도 기업·기관 내의 사일로(Silo)에 고여있는 상황
- 특히 빅테크 등 대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나,
 -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리기 시작한 스타트업에게는 어려운 과제로, 데이터 양극화 현상 심화
-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데이터 및 AI 학습 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포함 등의 이유로 인해 데이터 개방에 한계
 - ※ 미개방 공공데이터가 개방 데이터의 두배 이상 (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, '23.1월)
- 마이데이터를 통해 특정 분야 및 기업·기관에 갇혀있던 개인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동·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생태계 발전 가능
 -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맞춤형·선제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달성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 수행
- 마이데이터는 API 생태계 확산, 클라우드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·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

< 마이데이터 도입 전·후 데이터 활용생태계 변화 >



2 그간 추진경과 및 한계

- (추진경과) '16년 K-MyData 추진계획* 발표 이후, 금융·공공분야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, 기타 영역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

* '16.12.27.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(관계부처 합동)

- 금융 : 민간분야 최초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근거 (신용정보법, '20.8. 시행)를 마련하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

※ 마이데이터 이용자 5,480만명('22년, 중복포함), 65개 사업자('23.6월) 허가 획득

- 공공 : 행정·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(전자정부법, '21.12. 시행)

※ 본인 행정정보 159종을 전기요금할인, 대출신청 등 공공·민간의 98개 서비스에 활용, '23년 6월까지 4억 3천만 건 이상의 구비서류를 간소화

- 의료 : 건강정보 고속도로 중계시스템* 시범사업 추진('22.8.~'23.2.), 의료법 시행령** 개정('23.5. 시행)을 통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근거 마련

*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·활용하도록 지원

**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 신설(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)

- 기타 : 과기정통부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 수요, 서비스 혁신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실증서비스 발굴·지원('19년~)

※ 최근 3년간 실증사업 지원 실적 : ('21년) 의료·금융·공공 등 5개분야 8개, ('22년) 이종데이터 융합, 종합관리서비스 등 4개, ('23년) 공공·민간 데이터 융합, 종합관리서비스 등 6개

- (한계) 쏠분야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확산, 수익성 제고 등이 제약

- 금융·공공 분야 외에는 제3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증사업 외에 적극적 정책 추진 곤란

- 이종 산업·분야간, 민간에서 공공으로의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어 데이터 연계·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한계

◆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**전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근거를 마련** → 마이데이터의 **종합적 청사진** 필요

3 마이데이터 성공의 전제조건

◆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선결요건

- 보이스 피싱, 정보유출 등을 겪은 국민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나의 통제권 下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 강화
 - ※ 국민 86%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, 국민 17%가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('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)
- ➡ 전 분야 확산시 개인정보 이동·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되어야 마이데이터 안착·성장 가능

◆ 데이터 상호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시장 뒷받침

- 금융·공공 등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 성장 중이나, 쏠분야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는 미흡
 - ※ EU 등 해외 주요국도 마이데이터를 제도화했으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
- ➡ 다양한 인증·식별체계간 상호연계, 표준화 및 API 확산, 데이터 중계 등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위한 인프라 보강 필수
 - * (데이터) 금융·공공은 정형데이터 비중이 높은 반면, 타분야는 영상·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 (식별체계) 금융·공공은 각각 CI, 주민번호 단일식별자인 반면, 타 분야는 ID/PW 등 다양

◆ 데이터 기득권 타파 등 이해관계 조정 필요

- 데이터 보유기업은 기득권 약화, 비용부담 등으로 데이터 공유·확산에 소극적이어서 데이터가 필요한 스타트업 등과 이해상충 발생
 - * (예시) 빅테크는 쇼핑·결제이력 등 상세정보 제공을 꺼려 핀테크 등과 긴장관계 발생
- 이해관계자간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개인정보 활용 여부·방식 등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불편 감내
- ➡ 데이터 보유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전송과금, 인센티브 등을 설계하고 민-관 소통 기반의 이해관계 조정체계 운영
- ➡ 제도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, 국민 편익을 높이는 분야·서비스는 적극 추진

◆ 주요국은 데이터 전송권 법령 마련하였고 보완 입법 등도 진행중

- (EU) '16년 GDPR에서 데이터 이동권* 도입, '18년 PSD2**를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추진, 최근 의료데이터 공유·활용을 위한 EHDS***발의
 - * GDPR :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판독가능한 형식으로 본인·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
 - ** 제2차 지급결제서비스지침(Payment Services Directive 2), '18.1월 시행
 - ***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 법안(European Health Data Space Regulation), '22.5월 발의
- (미국) 연방 일반법은 없고, 아동·의료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*이 제정되었으며, 일부 주(州)는 주법으로 개인정보 전송권** 도입
 - * 아동 온라인 분야(COPPA)·의료 분야(HIPAA)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
 - **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(CPPRA,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)의 경우 전송권을 열람권 또는 접근권의 연장선상에서 포괄적으로 규정

◆ 금융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일부 도입되고 있으나, 전분야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 등은 초기 단계

- (미국) 금융 마이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개발*, 블루버튼(의료)·그린버튼(에너지) 등 서비스 제공,** 의료시스템 데이터 연계 활성화***
 - * Mint(맞춤형 재무관리), Acorns(투자·금융상품 추천), Credit Karma(신용상태 관리) 등
 - ** 연방정부 주도로 의료·에너지·교육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스마트 공시 정책
 - *** 민간보험사-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데이터 연계(상호운용성) 활성화
- (영국) 오픈뱅킹 제도를 통해 금융 중심 서비스* 확산,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Midata 프로젝트를 추진('11년)하였으나, 활용성 낮음**
 - * Bud(맞춤형 금융서비스), Emma(금융데이터 통합관리), Yolt(자산관리) 등
 - ** Midata 사업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아 사용률 낮음('16년, Competition & Markets Authority)
- (EU) 보편적 법제화는 되었으나, EU 회원국별로 데이터·IT 인프라, 시장 성숙도 등의 격차가 심해서 마이데이터 활성화 제약

⇒ 국가 차원에서 법적·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것은 **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**한 사례

Ⅲ. 비전 및 미래상

◆ 비전 :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

◆ 목표 : 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30개 지정
 ②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규모 20% 이상 추가 성장
 ③신기술,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 등장

< 추진목표('27년) >

국민 체감 서비스	데이터 시장규모	마이데이터 기업**
30개 지정·지원	58조원으로 성장 '21년 23조원, K-DATA*	500개 이상 발굴

* 2022년 K-Data 산업백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매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으로, 마이데이터에 따른 순증효과 (+)11조

** 정보수신자로 플랫폼에 등록된 사업자이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

◆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미래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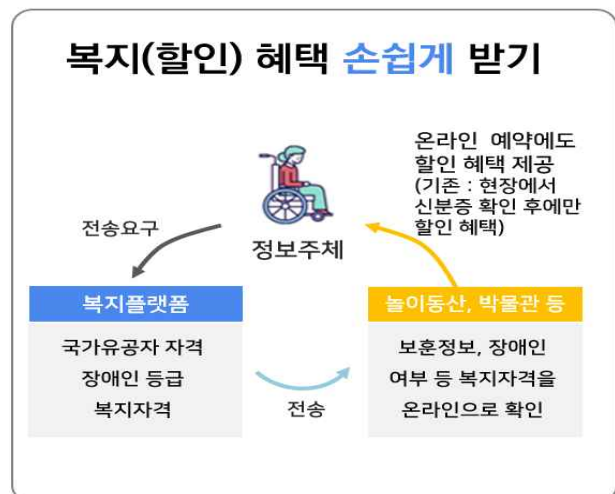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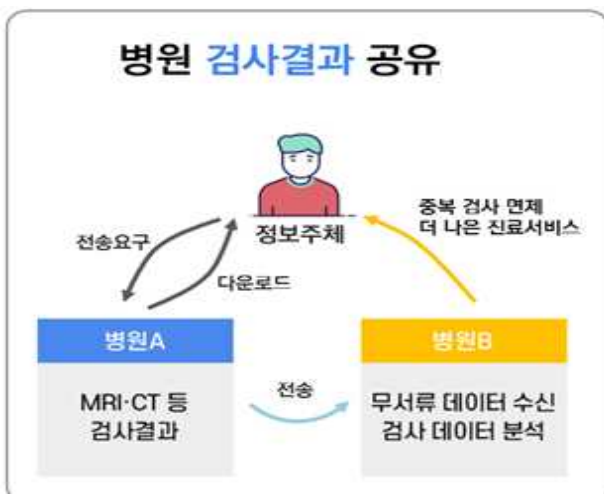
국민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.

○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,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

※ 개인맞춤형 학습관리, 건강관리, 식단관리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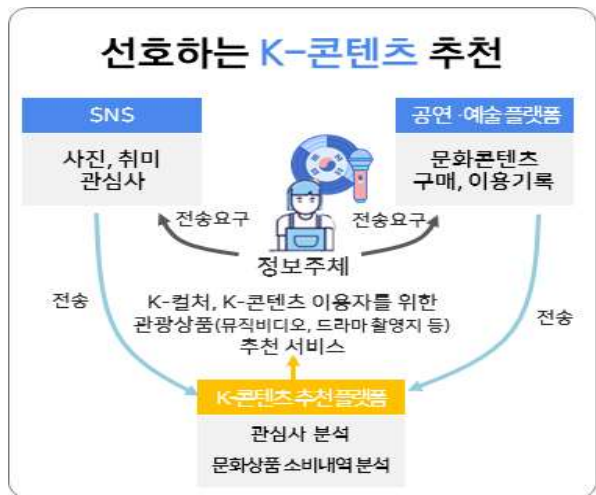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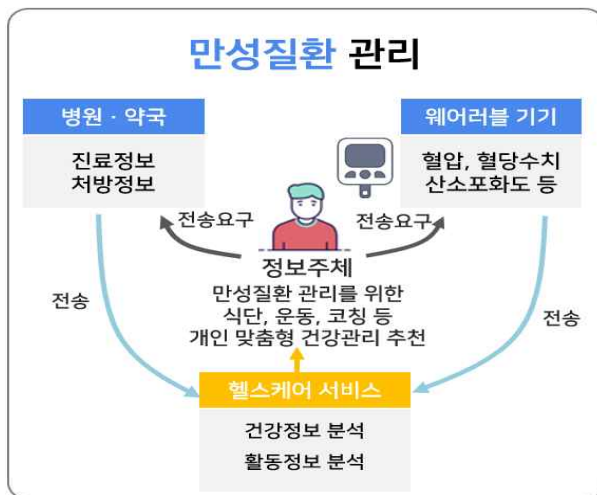
○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절차 없는 데이터 전송으로 국민 편의 증대

※ CT·MRI 등 진료정보를 CD가 아닌 데이터로 타병원에 전송 → 중복검사 경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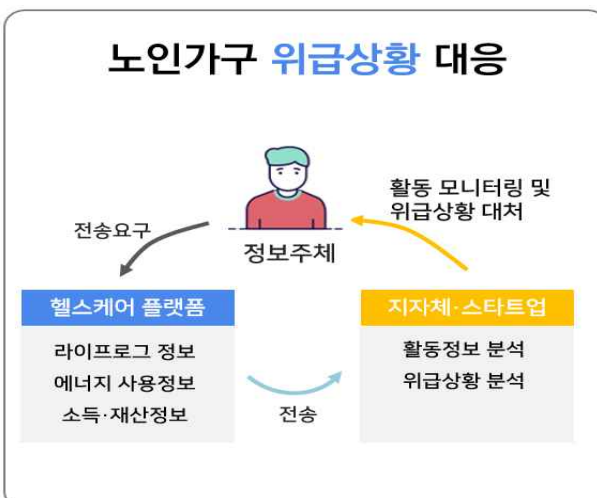
기업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과 경쟁 촉진으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.

-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산업·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간 경쟁·협업 활성화
- 우리 기업들의 AI·데이터·클라우드 관련 솔루션·플랫폼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, 데이터 기술·서비스 수출 등 해외진출 기회 확대



사회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됩니다.

-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·재난·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
- ※ 고령화 시대 의료-건강-돌봄 서비스 연계,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서비스 구현 등



IV. 추진방향 및 전략

미래를 위한 디지털 개혁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



국 민

- 데이터 주권 회복
- 초개인화 서비스, 서류 ZERO



기 업

- 혁신 비즈니스 창출
- 경쟁·협업 촉진 → 신성장동력



사 회

- 데이터 기반 행정
- 사회적 난제 해결

단계적·점진적 확대

선행·신규 분야 연계

민간 중심 제도 운영

정보주체 관점에서 서비스 구현

- 중점 추진 분야 선정
- 선도서비스 발굴

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

- 권익 보장 원칙 수립
- 개인정보 보호 매커니즘 구현
- 데이터 엄정관리 원칙 마련

플랫폼으로 투명한 권리행사 지원

-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
-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
- 프라이버시 신고센터 운영

단계적·점진적 접근

- 전송의무자 단계적 확대
- 전송데이터 단계적 혁신

민간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제도 운영

- 불필요한 진입규제 최소화
- 시장·산업 관점의 중계 제도 운용

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

- 참여 인센티브 확산 방안 마련
- 연계산업 확산
- 사회 난제 해결 프로젝트 확대

추진체계

범부처 마이데이터 민·관 협의회

마이데이터 추진단

1 추진 방향

◆ 시장 수용성,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·점진적 확대

- 제도 초기는 국민수요가 큰 분야 중심으로 집중 도입하되, 제도 도입취지·수용성, 준비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적용 확대
 - (데이터) 생애주기별 핵심서비스 등을 선정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되, 표준화 진행정도, 분야별 전송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범위 확대
 - (전송의무자) 빅테크 등 대기업,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,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

◆ 선행부문과 원활히 연계하고 신규부문으로 국민편익 확산

- 금융·공공 등 선행부문과 신규부문을 원활히 연계하여, 이중 영역간 다양한 데이터가 활발히 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
 - (금융) 금융데이터와 타 부문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질·양 확대
 - (공공) 민간·공공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 확대
- 의료·통신·유통 등 새로운 도입부문에 대해서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중 산업간 데이터 결합 서비스 확대
 - ※ 의료·통신·유통·에너지·복지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혁신서비스 발굴·확산

◆ 시장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 제도 운영

- 민간전문가·산업계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협의회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민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
 - ※ 관계부처, 민간·공공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운영
-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·기술기준 외 불필요한 진입규제 최소화
- 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·추진하고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 연계를 촉진하는 중계 전문기관 도입

2 추진전략

① 정보주체 관점에서 중점 추진부문 선정 및 선도서비스 발굴

□ **(중점 추진부문)**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제도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선정하여 제도를 우선 시행

○ 금년중 개인정보위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既선별

※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(23년 상반기)

- ▶ (설문대상) 국민 2,000명
- ▶ (설문내용) 정부 실증서비스(과기정통부), 기업·전문가 제안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 실시
- ▶ (설문결과) 응답자 50%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 30개 발굴

○ 선별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필요한 데이터 분야·기업 등을 분석하고 기업·전문가 심층조사 등을 종합하여 중점부문·분야(안)을 선정
→ 보건의료, 복지, 교육, 통신, 고용노동 등 10대 부문(21개 분야)

【중점부문 선정결과】

보건의료	통신·인터넷 서비스	에너지	교통	교육
· 의료(병·의원) · 의약품(약국) ·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	· 무선통신 · 플랫폼·포털 서비스	· 전기 · 가스 · 수도	· 철도 · 항공 · 자동차임대	· 초·중·고등 교육 · 평생교육 · 온라인 교습
고용노동	부동산	복지	유통	여가
· 고용알선·인력 공급	· 부동산 임대·공급	· 사회복지 서비스	· 온라인쇼핑 · 대형마트	· 숙박 · 여행

○ '23년 하반기 중 국민·기업 추가제안을 받고 데이터 표준화 수준,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분석·점검하여 초기 중점부문 최종 확정 예정

○ '25년 시행 초기에는 중점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되, 이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부문 및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

□ **(선도서비스 발굴)** 마이데이터 확산의 촉매가 되는 국민 체감서비스를 발굴·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우호적 인식 확산

- 10대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국민체감도와 국가적 파급력이 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에 대한 공모를 실시(‘24.1분기~)
- 관계부처*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민간·공공 부문의 다양한 선도서비스를 지정하고 예산·컨설팅 등 적극 지원

* 개인정보위(‘24년~), 과기정통부(‘19년~, 실증서비스 지원), 복지부(‘22.8.~’23.2. 건강정보 고속도로)

서비스	부문별 활용 데이터			
 사회적 고립가구 응급상황 대응 (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)	의료		복지	통신·인터넷 서비스
	· 만성질환 병력	⊕	· 전기·가스·수도 등 사용량	· 통신사용량 · 스마트폰 깨움 횟수
 진료 데이터 교류  만성 건강질환 관리  진료 처방 이력 관리	의료		복지	금융
	· 검사내역 · 진료·처방정보 · 건강검진정보	⊕	· 복지수급 정보	· 보험가입내역
 맞춤형 주거형태 및 매물추천, 대출상품, 청약 안내 서비스	부동산		금융	인터넷 서비스
	· 청약 신청 내역 · 관심지역	⊕	· 대출현황 정보 · 신용정보	· 부동산 관심 매물 · 플랫폼 등록 매물
 여행중 명소 맛집추천 이동경로 내 즐길거리	금융		여가	교통
	· 신용카드 결제 내역 · 카드 할인 혜택 정보	⊕	· 숙박시설 예약정보 · 여행상품 예약정보	· 교통수단 예약정보 · 목적지, 출발지 · 자동차 임대 정보
 최저가격추천, 쇼핑몰품 통합조회	유통		금융	인터넷 서비스
	· 주문내역 · 배송정보 · 상품평	⊕	· 신용카드 결제내역 · 선불카드(포인트 등) 정보	· 주문내역 · 배송정보 · 상품평
 맞춤형 일자리 매칭, 직무 강화 교육  시니어 취업 지원 서비스	고용노동		교육	
	· 구직(고용) 이력 · 관심기업 내역 · 이력서 정보 · 공공근로 정보	⊕	· 어학 점수 증명 · 평생교육 이수 증명	

* 국민 설문조사에서 50%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 예시

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

- **(권익보장 원칙)** 정보주체 권익침해, 제도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기본준칙 제시(☞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)
 - 서비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신(최소수집)
 -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, 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 제한(목적외 이용 제한)
 - 포괄적 목적으로 전송요구를 받아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전송요구시 데이터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제시
 - ※ 정보주체가 전송목적, 활용범위, 전송요구시 편익 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 등 최대한 명확하게 안내
 - 정보수신자는 전송요구 변경·중단 방법, 절차, 소요시간을 최초 전송요구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제공(균형된 권리보장)
- **(보호 메커니즘)**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데에 따른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 강화
 -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·유인행위 방지 대책 마련('24년)
 - 제도 시행 전까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부당한 유도·유인행위의 유형·방식 등을 심층연구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
 -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부당한 전송유도 신고·민원(→ 플랫폼 신고센터) 접수시,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서비스·기능 개선 등 신속 사후관리
 - 민감성이 높은 정보 등은 정보주체가 전송정보의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*하여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 행사 지원
 - * 전송요구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사용자 화면(UI, User Interface) 구성원칙 등 제시

- 전송·수신 과정에서 데이터 유·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체계 수립
 - 전송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조치 필요사항을 안내하는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마련(“23.下)
- 분야간 이질적 식별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이중 분야간 데이터를 연계·전송할 수 있도록 쏘분야 마이데이터 식별·인증체계 마련
- 정보수신자가 확보해야 할 시설·기술요건 등을 안전하게 설정하고, 정보수신자 관리·감독을 위한 기준·절차 수립
-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과징금·시정명령·과태료·벌칙 등 엄정 제재

□ **(데이터 관리)** 정보제공자·수신자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원칙 제시

- 정보제공자는 데이터의 정확성(진본성)·완전성·최신성을 유지하여 전송하고 정보수신자가 이를 훼손하는 것은 금지
- 전송요청을 받은 정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, 특별한 사정없이 부당하게 전송을 지연해서는 안됨
- 정보제공자는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데이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전송 거부 가능
- 유출사고시 법적책임 명확화 및 원활한 파기요청 대응 등을 위해 전송요구로 수집된 데이터는 자체 보유정보와 구분하여 관리
 - 다만, 물리적 분리보관으로 제한되지 않고, 기업 스스로 구분 가능한 방식*도 가능

*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정보주체의 파기·철회 등 권리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

3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 지원

- **(플랫폼 구축)** 전송요구, 전송이력 확인, 전송중단, 파기 등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권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'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' 구축
 - ※ 공공기관, 민간기업과 상호연계성 및 확장성이 확보되도록 **민간 클라우드 방식**으로 도입 추진
- 정보주체가 **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**(전송기업, 데이터 항목 및 날짜 등)을 플랫폼에서 **한 번에 확인**하고 관리
 - 정보제공자(☞ 다운로드 이력) 및 수신자(☞ 제3자 전송요구 이력)가 제공한 **마이데이터 전송이력***을 국민이 확인
 - * 전송이력 데이터만 플랫폼에 제공되며, 실제 데이터는 플랫폼에 연계·저장되지 않음
 - 기존 금융·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이력도 확인 가능하도록 인프라 연계
- 전송이력 확인후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
- '24년중 플랫폼 구축 및 '25년초 플랫폼 정식 오픈을 추진하되, 핵심기능은 '24년중 순차적으로 베타버전 공개·보완
- **(디지털 카탈로그)**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**디지털 카탈로그** 제공
 - 정보주체는 서비스 카탈로그 비교·검색 등을 통해 개인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가능한 데이터 목록 등을 파악
- **(프라이버시 신고)** 부당한 전송유도(다크패턴 등) 및 전송요구 거부, 전송 오류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
 - 신고 즉시 확인·점검하여 기능·제도를 개선하고 위법사항 확인시 신속히 조사·처벌 등 후속조치

4 시장 수용성,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·점진적 확대

- **(기본방향)** 초기에는 수요가 높은 부문 중심으로 도입하고, 제도 도입취지·수용성, 준비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·점진적 확대 추진
- **(전송의무자)** 제3자 전송요구권은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 및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, 적용대상 점진적 확대
 - 매출액, 개인정보 보유규모, 처리능력,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해 시장 현황조사를 거쳐 정보제공자 기준 결정('24.上)
 - ISMS,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 등을 참조하되, 제도로 도입 초기에는 전송의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범위 제한 예정
- **ISMS 의무대상 사업자** (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) ☞ **537개 사업자 적용**
 - **(기준)** ▶ 年 매출액 또는 세입 1,500억원 이상인 자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1만명 이상 대학교, ▶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, ▶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등
- **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사업자** (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) ☞ **652개 사업자 적용**
 - **(기준)** ▶ 상급종합병원, ▶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,000억원 이상인 자, ▶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등
- 다운로드권은 제3자 전송요구권에 비해 사업자 부담이 적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게 적용
- **(전송데이터)** 중점부문(10개)의 데이터 전송정보항목 후보군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전송범위 결정
 - (1차 공개) 이미 정보맵 및 표준안이 마련된 5대 부문(교육, 정보·통신, 유통, 교통, 여가)의 데이터 중 전송정보항목(안) 공개

- (2차 공개) 추가 정보맵 및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, 복지, 에너지, 고용, 부동산 등 나머지 5대 부문 데이터 중 전송정보항목(안) 공개
 - (의견 수렴) 정보항목 추가·구체화, 삭제·축소 등 민간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송대상 정보범위 결정
- '25년 제도시행 후에도 매분기별 「데이터 전송 조정협의체(가칭)」를 통해 시장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데이터 전송범위 확대

5 민간·시장의 역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·정책 운용

□ **(진입규제)**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, 필요한 부분만 허가·지정제 운영

-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·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, 별도의 진입규제는 배제

※ 시설·기술기준 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플랫폼 등록·연계시 확인

- 민감한 정보 대규모 취급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*은 예외적으로 허가제(전문기관 지정) 운영

* 정보 자체의 민감도, 유·노출시 파급력 및 위험도 등 고려(의료, 미성년 교육정보 등)

※ [지정요건] ①기술수준 및 전문성, ②안전성 확보조치, ③재정능력, ④사업계획 적정성 등

- '24년중 기업·기관 신청을 받아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 지정

□ **(중계기관)**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중 분야간 데이터 이동·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중계 전문기관 도입

○ **분야별 중계 전문기관***을 지정하되 **민간·공공기관** 제한없이 허용
(개인정보위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)하고 중계방식도 **다변화**

* (개념)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수신자에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 기관

* (중계방식) 중계집중식(금융마이데이터 중계), 아카이브식(진료정보교류 등) 등 다양하게 검토

- 독과점 등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중계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보완

○ 중계 전문기관 준비 지원을 위해 **표준 참조 중계모델** 마련

○ **특정서비스 몰아주기, 데이터 독과점** 등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중계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기관 분리

※ **PDS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**은 기존 실증사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**효용성 및 부작용**을 검토하고 추가 연구를 거쳐 **도입방향 별도 발표**

- 체계적 보관·관리, 기업 사업기회 확대 등의 **유용성**이 있지만, 데이터 집적에 따른 보안 위험 등의 **부작용**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필요

6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립

□ **(인센티브)** 기업의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해 **과금체계***를 수립하고, 기업의 마이데이터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 추진

* 과기정통부 전송과금·보상 가이드라인 용역('23년), 금융위 과금기준 결과('23년중), 개인정보위 연구결과('23년) 등을 참고하여 과금체계 기준 마련

□ **(연계산업)**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**API 인프라**를 확장하고, AP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**클라우드 및 SW 아키텍처***, 데이터 마이닝 확산 추진

* 변경·재사용이 용이한 Micro Service Architecture 등의 SW 아키텍처

□ **(사회 프로젝트)** 데이터 활용으로 안전·복지·범죄예방·재난·환경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부·공공 서비스 확대

《 단계별 추진전략 》

◆ 【준비 : '23~'24】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집중

- **(법제도)**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도록 전송요구·다운로드권, 열람·확인권, 전송·활용 중단권 등 정보주체 권리 법제화
- **(플랫폼)** 국민이 투명하게 나의 정보를 관리하도록 마이데이터 전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
- **(표준화)** 이종 산업·분야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·융합을 위해 데이터 형식·전송규격의 공통규칙을 만드는 표준화 추진

◆ 【도약 : '24~'25】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시장기반 구현

- **(선도서비스)** 국민이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홍보 강화
- **(참여유인)** 기업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과금체계 수립, 기업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, 중소기업 중계시스템 지원 확대 등 추진
- **(프라이버시 보호)** 국민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·인증체계, 보안체계, 사후 제재 등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·제도적 메커니즘 보강

◆ 【확산 : '25~'27】 데이터 체질 강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생태계 고도화

- **(API 확산)** 데이터와 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API 경제인프라 확장
- **(혁신기업)** 데이터 확산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 SW 전문기업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창출
- **(사회 프로젝트)** 데이터 활용으로 안전·복지·범죄예방·재난·환경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부·공공 서비스 확대

V. 부문별 발전방안

선행부문

◆ 금융·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가 고도화·확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·인프라를 연계하고 시너지 창출 선도사례 발굴·지원

- 이종 영역간 다양한 데이터가 활발히 연계·융합될 수 있는 기반 마련
 - 금융 : 금융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금융데이터 항목을 발굴하고 다양한 융·복합서비스 확대
 - 공공 : 민간·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 확대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
 - ※ 공공-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 중인 '혜택알리미'(국민 맞춤형으로 수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알림 제공) 서비스 고도화 지원
- 신규부문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선행부문 한계보완 및 장점 극대화
 - 금융 : 엄격한 정보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심사 간소화* 검토
 - *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시설·기술기준이 중복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하는 등 심사 절차 간소화
 - 단, 허가제로 운영되는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 심사 필요
 - 공공 :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상 기준*을 모두 준수하도록 연계
 - * 보안저장소 등 시설·설비 기준 및 본인정보 활용 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승인기준 등
- 국민의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공공·금융분야 데이터 전송 이력을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 연계
 - ※ 금융·공공부문에서 기구축한 플랫폼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이력 관리

◆ **의료·에너지·통신 등 새로운 도입분야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촉진**

- 중점부문*을 중심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설계하여 국민이 데이터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

* 국민 설문조사 및 기업·전문가 심층조사 등을 종합하여 국민수요가 큰 10대 중점부문(안) 선정
- 의료, 복지, 에너지, 고용, 부동산, 교육, 통신·인터넷서비스, 유통, 교통, 여가

※ 주요 부문별 발전방향 예시

- ▶ (의료) 불필요한 CD·서류 발급없는 환자 진료 서비스를 구현하고 의료데이터 기반의 바이오·헬스 신시장 창출로 산업경쟁력 강화
- ▶ (통신) 국민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선택을 촉진하고 문화·여가·안전 등 타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한 융합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 제고
- ▶ (인터넷서비스)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편익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 발굴 및 데이터 시장 다양화
- ▶ (복지) 고령화·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,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 제고
- ▶ (에너지) 에너지원 사용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융합 서비스 확산

- 국민체감도와 국가적 파급력이 큰 선도서비스를 발굴·지정하고, 마이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통해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 확대
- 부문별로 전송대상 정보항목 후보군을 발굴·공개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전송대상 정보범위 설정
-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부문별 전송이력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

⇒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각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,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및 협의회를 통해 최종 정책방향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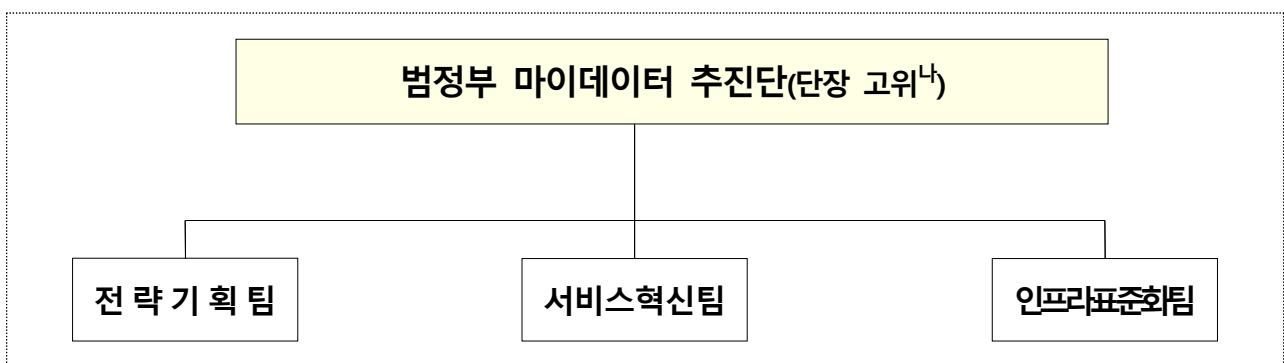
VI. 추진체계

□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

- (구성)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학계·산업계·시민단체·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 운영
 - 정부위원 : 기재부·교육부·과기정통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·국조실·금융위
 - ※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참석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참여 가능
 - 민간위원 : 마이데이터 관련 학식·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산업계·시민단체·학계·연구기관 등 전문가
- (역할)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, 선도 프로젝트 발굴, 마이데이터 기업 인센티브 설계,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등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 논의

□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

- (구성) 마이데이터 제도·정책의 설계·운영을 위해 관계부처*, 민간·공공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운영
- * 금융위, 행정안전부, 과기정통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교육부 등 마이데이터 주요 부처 참여



- (역할)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, 표준화 추진, 플랫폼 구축·운영, 보안·인증 등 인프라 마련,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 집행·운영

※ '23.7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수립, '23.9월 협의회 출범 예정

VII. 향후 일정

주요 과제	일정	주관 · 협조부처
◇ 중점 추진 분야 선정		
▪ 수요조사 등을 통한 중점분야(안) 선정	'23.上~	마이데이터 추진단 (이하 '추진단')
▪ 국민·기업 추가제안 및 인프라 여건 분석	'23.下	
▪ 중점분야 최종 확정	'23.下	
◇ 전송대상정보 확정		
▪ 정보맵 및 데이터 표준규격안 의견수렴	'23.下~	추진단
▪ 정보전송항목 확정	'24.	
◇ 전송의무자 기준 확정		
▪ 매출액 등 시장 현황조사	'23.下~	추진단
▪ 전송의무자 기준 확정	'24.	
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		
▪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기준 마련	'23.下~	추진단·복지부· 과기부·산업부 등
▪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	'24.~	
◇ 선도서비스 발굴		
▪ 선도서비스 공모 실시	'24.上	추진단·복지부·과기부 금융위·산업부 등
▪ 선도서비스 확산	'25.~	
◇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		
▪ 플랫폼 구축 착수	'24.上	추진단
▪ 플랫폼 베타버전 공개·보완	'24.下	
▪ 플랫폼 정식 오픈	'25.上	
◇ 프라이버시 보호		
▪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마련	'23.下	추진단
▪ 식별·인증체계 수립	'24.	
▪ 부당한 전송 유도·유인행위 가이드라인 마련	'24.	
◇ 참여유인 제고		
▪ 과금체계 연구·분석	'23.下~	추진단·금융위· 과기정통부 등
▪ 과금체계 마련	'24.~	
▪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 추진	'24.~	